李, 열세 충청·강원에 화력 집중
朴, 수도권·젊은층 연고자 접촉

한나라 대선경선 '8월 대회전' 비책은

한나라당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의 정치적 명운을 건 8월 대회전의 막이 올랐다.

연말 대권 본선티켓 한장 놓고 근 1년여간 겨뤄온 두 주자간 승부가 앞으로 18일간의 총력전에서 판가름나게 되는 것이다.

◇'집토끼' 잡기·'중립 당협' 공략=현재 243개 당원협의회(옛 지구당) 중 양 캠프가 서로 우세를 주장하고 있는 당협은 이 전 시장측이 130~140곳, 박 전 대표측이 106곳 정도다.

양 측은 기본적으로 우세를 보이고 있는 당협에 소속 국회의원이나 당협 위원장을 모두 내려보내는 이른바 '하방'을 통해 '집토끼'를 지키는 전략을 구사하면서 20여 곳으로 파악되는 '중립 성향' 당협 공략에도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이에 질세라 박 전 대표도 지난달 31일 직접 주재한 선거대책회의에서 "국회의원들은 자기 지역부터 챙겨달라. 남의 지역 챙긴다고 뛰어다니다가 안방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박 전 대표측은 동시에 당협위원장 성향 등으로 판세가 상대방쪽으로 기울어진 당협보다는 지지율이 ±5% 포인트 오차범위 내 접전이 펼쳐지고 있는 당협을 공략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李 '충청·대구 따라잡기'…朴 '수도권 바람몰이'=이 전 시장측은 현재 대구, 충청, 강원 등에서 박 전 대표에 비해 열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고 막강한 당협 조직력을 바탕으로 마지막 화력을 쏟아붓고 있다. 충청·강원지역의 경우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통한 내륙 낙후지역 개발 등 지역특성에 맞는 공약을 제시하면서 지역 표심을 자극한다는 방침이다.

박 전 대표측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영남과 충남권에서 승기를 잡았다고 보고 이 기세를 열세지역인 수도권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서 박 전 대표측은 '연고자 접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李 장년·노년층, 朴 젊은층 공략=각 종 여론조사에서 이 전 시장은 장년·노년층에서 상대적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이 전 시장은 장년.노년층이 박 전 대표에 대한 동정론과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로 인해 '막연한 선택'을 하고 있다고 보고 이들의 젊은 자녀들을 상대로 '우회 설득' 작업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시장과는 반대로 젊은 연령층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 박 전 대표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30~40대를 대상으로 박 전 대표의 강점, 이 전 시장의 약점을 적극 홍보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후식기자 who@연합뉴스

아프간 사태 朴캠프 '냉가슴'

합동연설회 역전 분위기 기세 꺾일까 우려

아프가니스탄 한국인 피랍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한나라당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 캠프가 한 숨을 쉬고 있다.

라이벌 이명박 전 서울시장에 뒤지고 있지만 최근 전국 합동연설회를 통해 역전의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자평하는 상황에서 '아프간 사태'로 자칫 기세가 꺾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조심스럽게 나오기 때문이다.

이번 합동연설회에서 노무현 후보가 이인제 후보의 대세론을 잠재우고 극적으로 승리한 2002년 민주당 16개 시·도 순차경선의 재연을 염두에 뒀던 박 전 대표측은 국민적 축제 분위기를 기대했지만 아프가니스탄에서 납치된 한국인 중 2명이 숨지면서 전국적으로 숙연한 분위기가 조성되자 벙어리 냉가슴 앓듯 속으로만 끙끙대는 것.

이 같은 분위기를 감안한 듯 캠프 내 누구도 공식적으로 이번 사태를 정치적 이해득실 차원에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석에서는 내심 안타까움을 내비치고 있다.

캠프 관계자는 "아프간 사태로 지지세가 확산되고 있는 박 전 대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쏠릴 기회가 줄어들까 걱정"이라고 말했고, 다른 관계자도 "맹추격을 하는 상황에서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것이 유리한 만큼 이런 상황이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고 공감했다.

한편 이 전 시장측은 이번 사태가 경선 막판에 '호재'가 될 것이란 일부 관측에 대해 극도의 거부감을 나타내면서도 합동연설회 등 막판 변수들이 이슈화하지 못하면서 현 우위 구도가 굳어질 것이라는 전망에는 은근히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연합뉴스

검찰, 李후보에 서면질의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경선후보 등을 둘러싼 고소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최재경 부장검사)는 열린우리당 김혁규 의원이 고소한 이 후보와 이 후보 캠프 대변인인 박형준 의원에게 서면질의서를 보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김 의원은 한나라당이 "이 후보를 음해하려 공공기관의 수사·소송기록,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열람·사용했다"며 '위장전입' 의혹 등을 제기한 자신 등 열린우리당 의원 5명을 수사의뢰하자 이 후보와 박 의원을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었다.

김홍일 3차장검사는 "이 후보에게 피고소인 자격으로 필요한 질문서를 작성해 오늘 아침 발송했다"며 "답변 내용을 분석한 뒤 필요하면 출석 요청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난달 30일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으로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경선 후보의 외곽 후원조직인 '희망세상21 산악회'를 결성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모 회장과 권모 사무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연합뉴스

日 전쟁범죄 '국제적 규범' 제시

■ 美 하원 위안부 결의안 만장일치 통과 의미

'4전5기' 끝 성과…日 역사왜곡 세계 알리는 계기

역사적 논란거리로 남아 있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중대한 전기가 마련됐다.

그간 '당사국 해결' 입장을 내세워 미온적 태도를 보여온 미국 하원이 지난달 30일 2차대전 당시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에 대한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시인과 사과, 역사적 책임을 요구하는 위안부 결의안(HR 121)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그간 미 의회에서 위안부 결의안 처리 시도가 총 4차례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이번 결의안 가결은 '4전5기'만에 성공을 이룬 셈이다.

◇'4전5기' 끝에 이룬 역사적 위업=이번 결의안 처리는 역사적 측면에서 필연적 귀결이라고 볼 수 있다.

그간 유엔 인권위원회를 비롯,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국제법률가협회, 국제사면위원회 등이 위안부는 강제 동원이었고 성 노예였으며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지적해 온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결의안 처리는 역사적 필연이었다는 게 관계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최초의 위안부 결의안 처리 시도는 지난해 9월 12일 미 하원의 레인 에번스, 헨리 하이드 전 국제관계위원장 주도로 이뤄져 국제관계위(외교위 전신)를 통과한 적이 있지만 일본측의 강력한 로비에 막혀 결국 12월 8일 하원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일본계 3세 마이클 혼다 의원이 금년 1월 31일 위안부 결의안을 다시 제출했으나, 처리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아베 총리가 3월 1일 "위안부 강제동원 증거가 없으며, 결의안이 채택돼도 일본 정부가 사죄할 의향이 없다"는 오만한 발언과 일본측의 강력한 로비활동이 오히려 미 의회의 분노를 샀다.

게다가 2차대전 당시 인도네시아에서 일본군에 위안부로 끌려가 치욕의 세월을 살았던 네덜란드계 호주인 얀 루프 오헤른(84) 할머니의 증언과 동아시아에서 뿐만 아니라 미국령 괌에서도 여성들을 위안부로 강제동원하는데 개입됐음이 미 해군 문서에서 확인됨으로써 결의안 처리쪽으로 급선회했다는 분석이다.

◇결의안 처리 역사적 의미=이번 결의안은 위안부 강제동원을 부인하고 있는 일 정부의 부당성을 지적한 미국의 공식 문서로 남게 됐다.

비록 이 결의안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미 의회가 일본군의 종군위안부 강제 동원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공식 인정했다는 점과 역사적 진실을 외면해온 일본 정부에 맹성을 촉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제(日帝) 만행에 대한 역사바로세우기에도 큰 영향을 줄 전망이다.

특히 일 제국주의의 야만적인 인권 유린과 일본정부의 후안무치한 역사왜곡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각) 미 하원에서 위안부 결의안이 채택된 뒤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워싱턴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은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법적인 배상을 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신화=연합뉴스

그간 일본 정부는 결의안 채택시 미일동맹 관계를 해치고 미국이 수행중인 대이라크전에도 협조할 수 없다며 강력한 로비를 펼쳤지만 미 하원 외교위는 이날 양국 관계와 '20세기 최대의 인신매매 사건 중 하나'로 규정된 위안부 문제와는 별개 사안임을 분명히 한 셈이다.

미 의회의 이번 결의안 처리는 일본내 우익세력의 역사적 사실 부인과 왜곡에 실망, 아베 정권의 비윤리적이고 부당한 태도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결과로 풀이된다.

때문에 미 일각에선 아시아 맹주 자리를 놓고 중국과 경쟁하고 있는 일본이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어두운 과거사를 왜곡하려 들지 말고 과거 독일처럼 과오를 솔직히 인정, 피해를 준 주변국들에게 진정으로 사죄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在美 한인 풀뿌리운동이 일본 로비 이겼다"

위안부 결의안 통과 앞장 김동석 소장

"어떤 거대한 로비도 시민들의 풀뿌리식 운동을 이길 수 없다는걸 알았습니다"

미 하원 위안부 결의안 통과 운동을 주도한 김동석 한인유권자센터 소장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각) "코리언 아메리칸들의 풀뿌리운동이 일본의 거대한 반대 로비를 이겨냈다"며 감격스러워 했다.

뉴욕에 살고 있는 김 소장이 미 의원들을 상대로 위안부 결의안 통과를 설득하기 위해 현지 한인들과 함께 버스를 빌려타고 워싱턴 미 의사당을 찾은건 이날까지 모두 11번.

"피말리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아예 시작을 안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제 미국 의회가 일본의 역사왜곡은 안된다는 단호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제 세계가 위안부를 비롯한 일본의 과거사 왜곡은 잘못이라고 당당히 지적할 것입니다"

미 하원의 위안부 결의안 통과는 일본의 과거사 왜곡에 이제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미국 정치권이 일본 정부에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김 소장은 강조했다.

일본의 반대 로비는 너무나 치밀하고 집요했다. 분명히 통과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로 결의안을 밀어붙이다가도 일본이 교묘한 걸림돌을 만들어 의원들을 설득하면 분위기는 반전되기 일쑤였다.

"미일동맹이 저해될 것이란 일본측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문제를 한일간의 국제적 분쟁에 미국이 개입하는게 아니라, 미국도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할 인권문제라는 점을 부각시킨 전략이 주효했다"고 그는 평가했다.

김 소장은 결의안 통과를 계기로 당장 한인들의 정치력을 높이기 위한 전국적 조직을 결성하는데 나설 계획이다.

/워싱턴=연합뉴스